

서울중앙지방법원/한국지식재산권변호사협회
Bench & Bar Conference

영업비밀 침해소송의 실무와 쟁점



2018. 9. 10.

변호사 이 석 희

KIM & CHANG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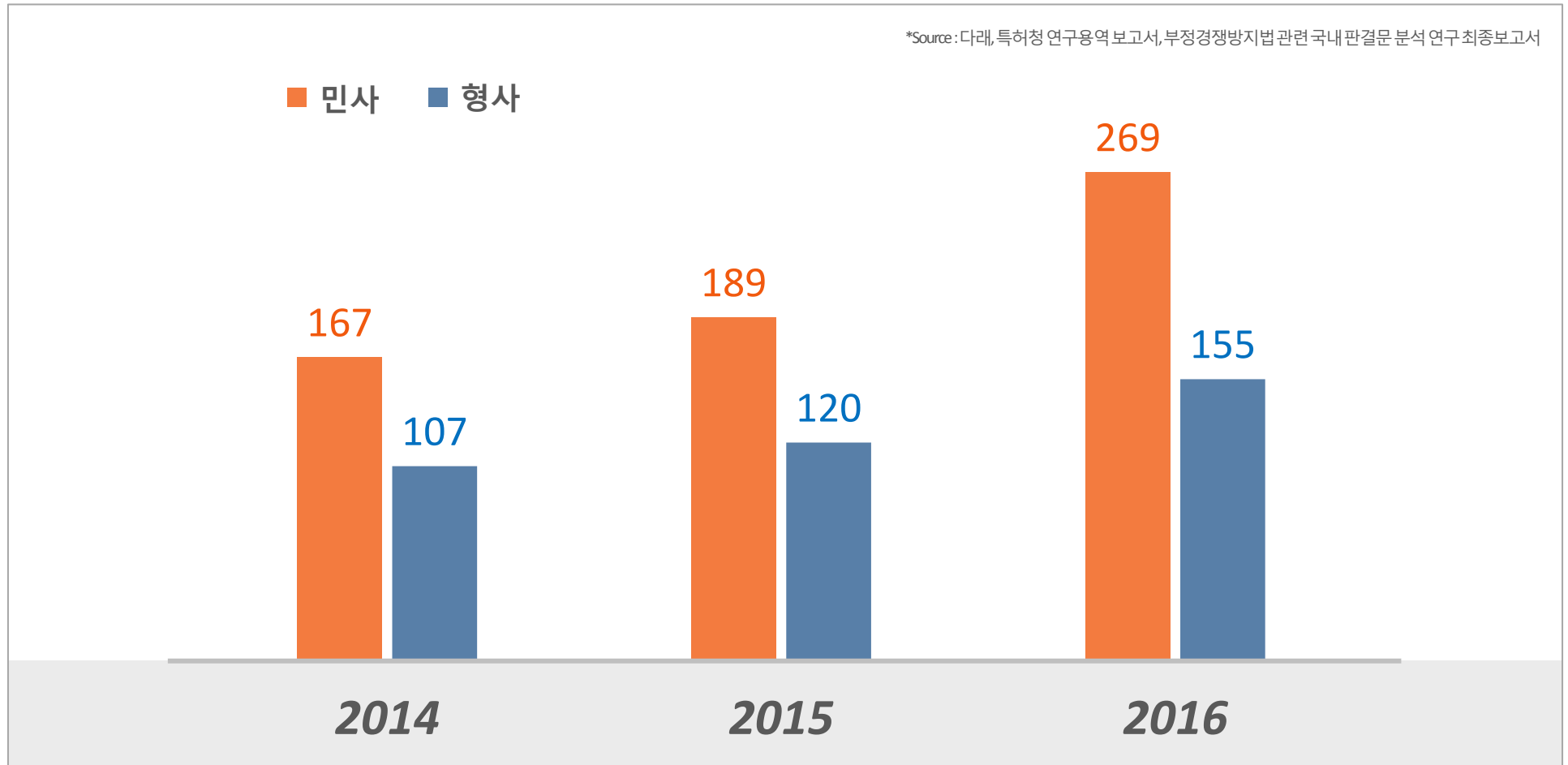
- I. 영업비밀 침해사건의 현황
- II. 영업비밀 침해소송의 실무상 주요 쟁점
 - ① 영업비밀의 특정
 - ② 비밀관리성의 판단 기준
 - ③ 소송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출 우려
 - ④ 영업비밀 침해 증거의 확보 방안
 - ⑤ 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



I. 영업비밀 침해사건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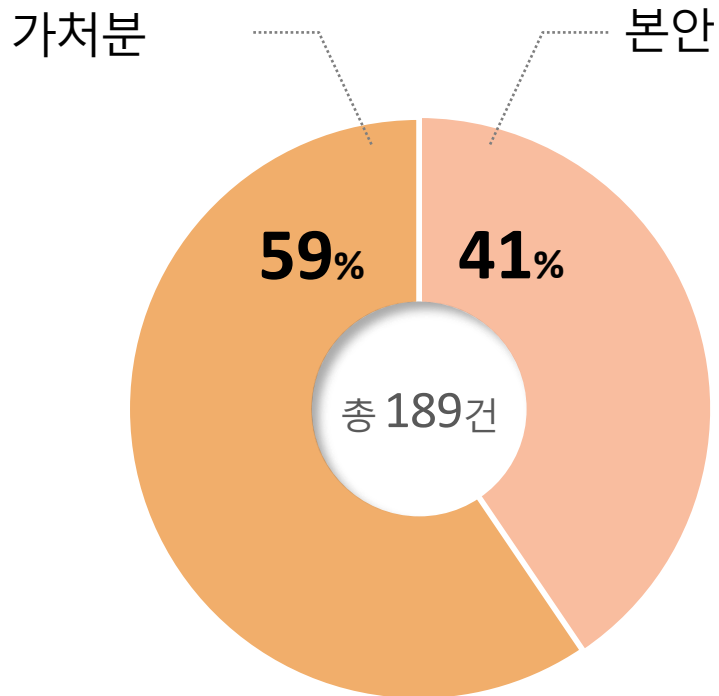
영업비밀 관련 사건의 지속적 증가

최근 3개년 영업비밀 관련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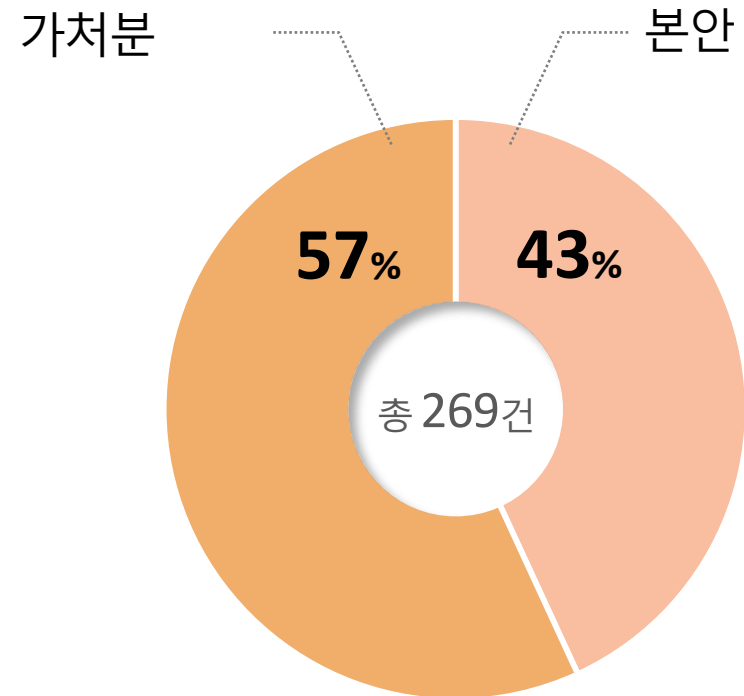


영업비밀 관련 민사사건 법원 판결 선고 수

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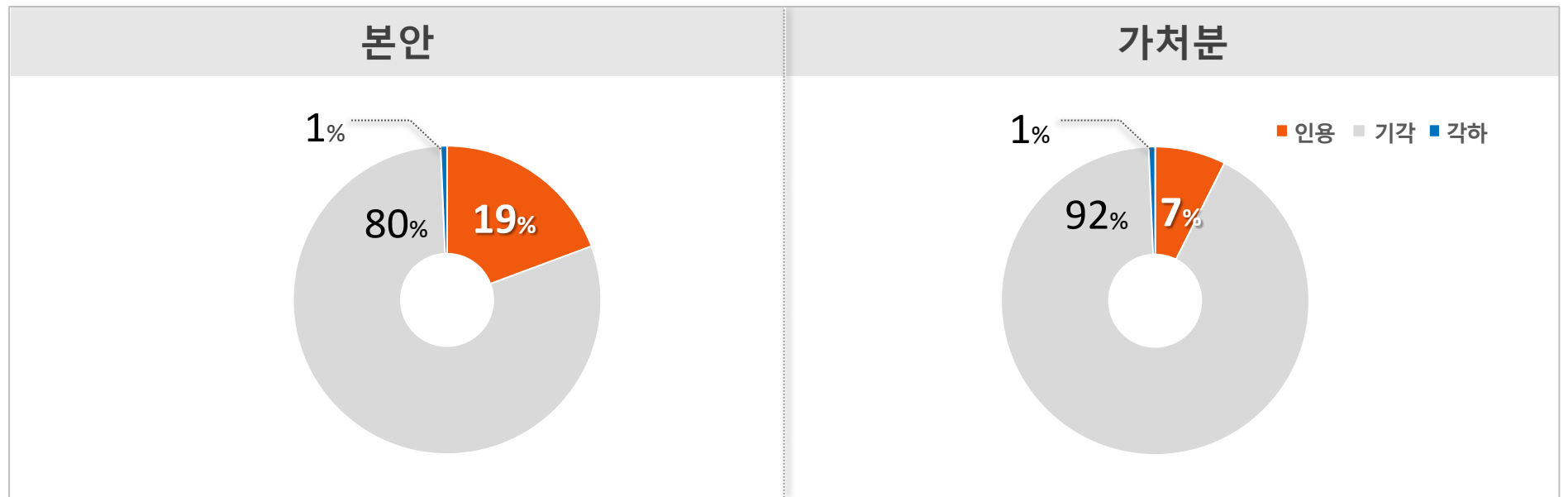
2016년



*Source: 다래, 특허청 연구용역 보고서,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국내 판결문 분석 연구 최종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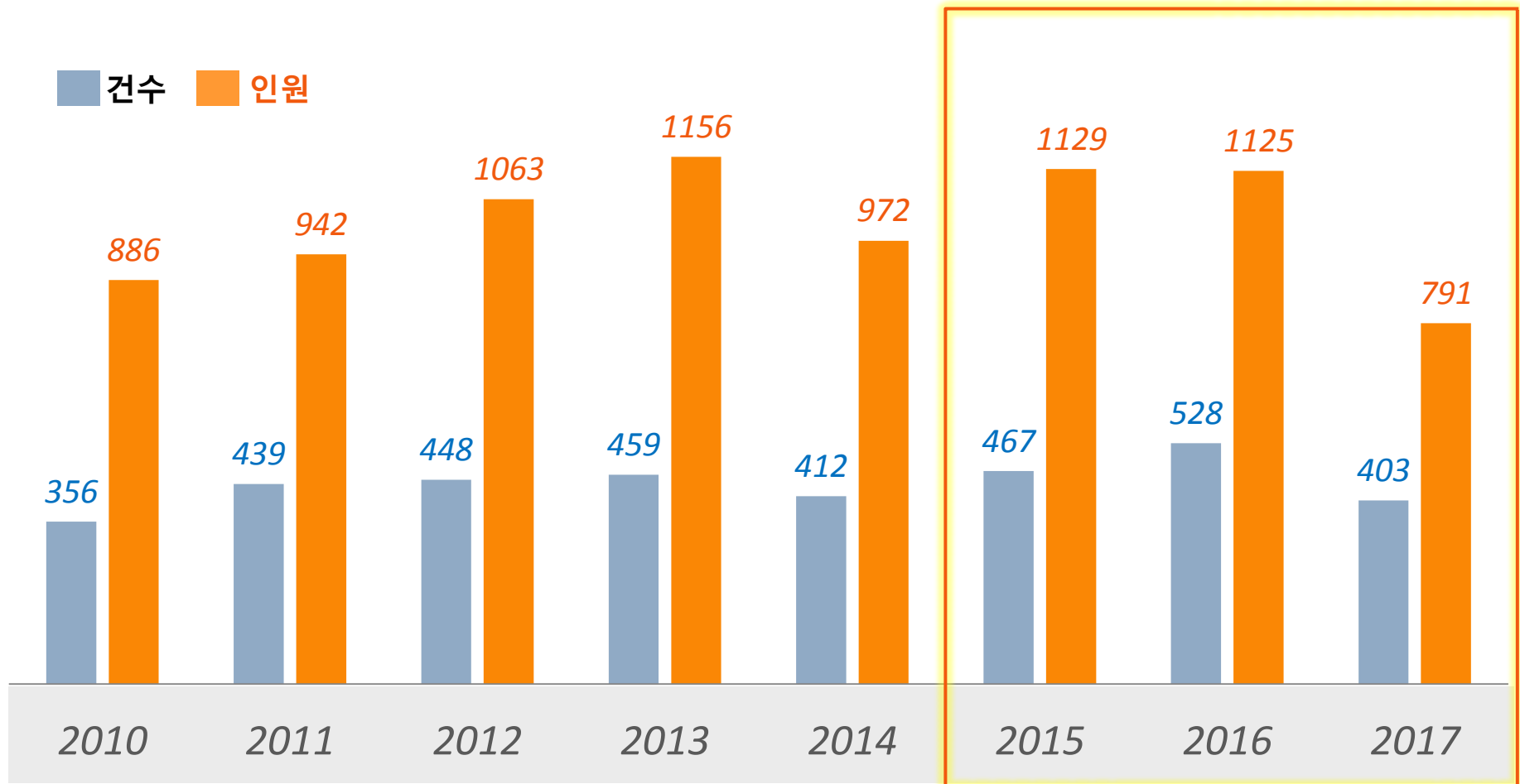
영업비밀 관련 민사사건 처리결과 (2015 ~ 2016)

구분	인용	기각	각하	합계
본안	47	147	1	195
가처분	42	220	1	263
합계	89	367	2	458



*Source: 다래, 특허청 연구용역보고서,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국내 판결문 분석 연구 최종보고서

대검찰청 - 영업비밀 유출 사범 검거 실적



대검찰청 - 영업비밀 사건 처리 결과(2017년)

	건 수	인원 (%)	검찰처리내역(명) (%)					
			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구약식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부경법위반	387	754	7	72	21	28	6	620
산기법위반	16	37	3	10	1	3	0	20
합계	403	791 (100)	10 (1.2)	82 (10.3)	22 (2.7)	31 (3.9)	6 (0.7)	640 (8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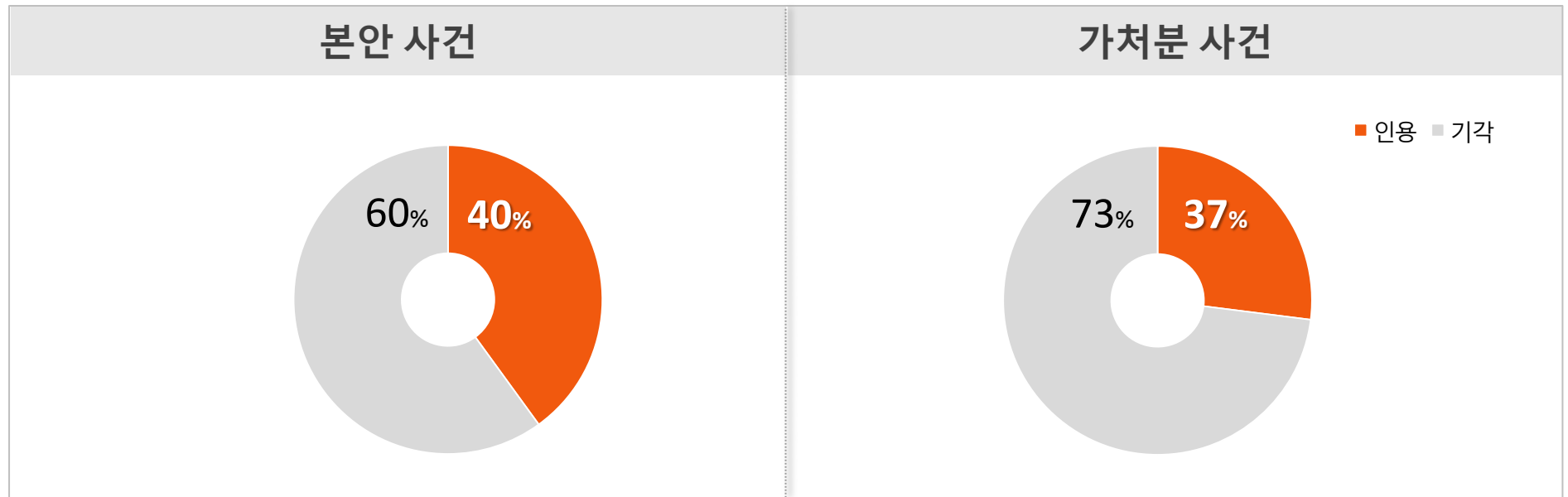
법원 - 영업비밀 관련 형사사건 처리결과 (2015 ~ 2016)

구분	유죄	무죄	선고유예 등	기타	합계
영업비밀 침해	135	48	1	-	184
영업비밀 침해 및 업무상배임	202	56	-	1(면소)	259
업무상배임	96	14	-	-	110
합계	433	118	1	1	553

Source: 다래, 특허청 연구용역 보고서,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국내 판결문 분석 연구 최종 보고서

전직(경업)금지 사건 인용률 (2015 ~ 2016)

구분	인용	기각	합계
본안	18	27	45
가처분	31	84	115
합계	49	111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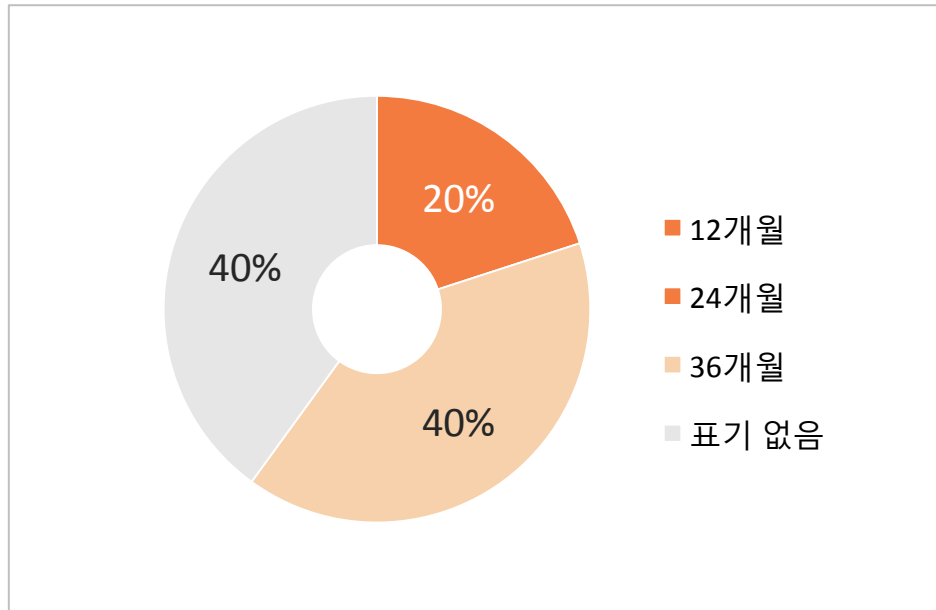


* Source: 다래, 특허청 연구용역 보고서,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국내 판결문 분석 연구 최종 보고서

전직(경업)금지 사건에서 인정된 금지기간 (2015 ~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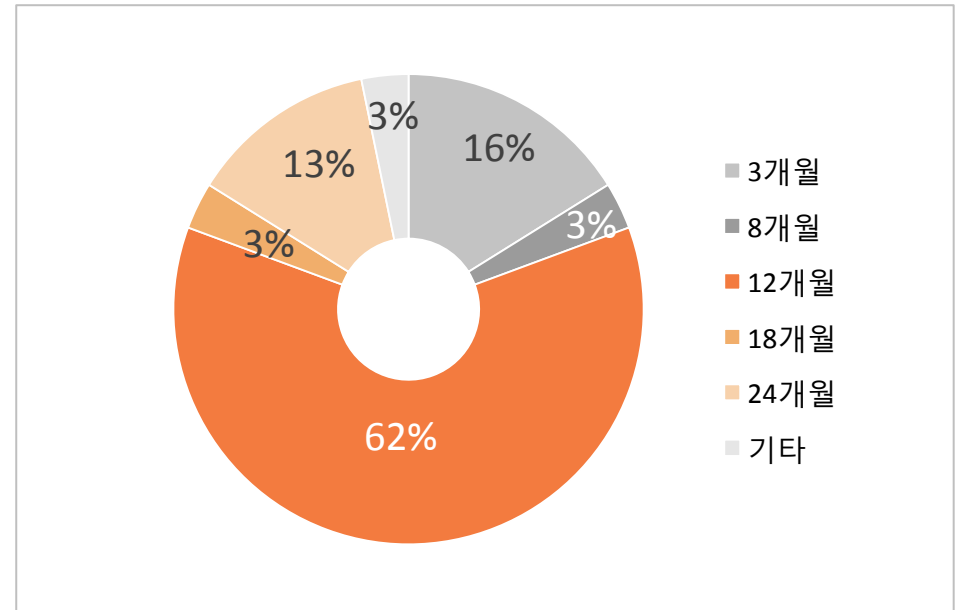
본안 사건

구분	12개월	24개월	36개월	합계
사건 수	-	1	2	5



가처분 사건

구분	3개월	8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합계
사건 수	5	1	19	1	4	31



*Source: 다래, 특허청 연구용역 보고서, 부정경쟁방지법관련 국내 판결문 분석 연구 최종보고서

형사사건 중심의 영업비밀 사건 실무 경향

기초 증거 확보의 어려움

- 영업비밀 침해 경로 확인/입증의 어려움
- 압수수색 등 수사 절차를 통한 사실확인 및 증거 확보

민사소송 절차를 통한 실효적 권리구제의 어려움

- 소송 중 실질적인 영업비밀 유출의 피해 지속 우려
- 영업비밀의 가치/피해에 상응하는 실효적 손해배상액 산정의 어려움

영업비밀 침해 형사처벌 대상행위의 포괄성

*Source: 김병국(특허법원 판사), 기술정보의 침해범죄에 관한 현행 법률 및 형사실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저스티스 제165호, 2018.4.

- 민사 영업비밀 침해행위보다 형사 구성요건이 더 폭넓게 해석
- 영업비밀 요건이 인정되지 못하더라도 업무상배임으로 처벌 가능



II. 영업비밀 침해소송의 실무상 쟁점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재전담부 소송절차

* Source: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식재산전담부 소송절차 안내, 2018.

소장 제출 및 송달

- 청구의 근거가 되는 권리 및 구제절차의 명확한 특정

답변서 제출

- 부인하는 부분과 항변 사항을 나누어 답변

변론 준비

- 변론준비기일 진행 또는 조정절차 회부 분류
- 석명준비명령 또는 보정명령

변론기일 진행

- 기술설명기일 진행 가능
- 침해성립과 손해산정 쟁점 분리 및 침해성립 우선 심리 가능



변론 종결 및 판결 선고

영업비밀 침해소송의 절차별 주요 이슈

* Source: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식재산전담부소송절차안내, 2018.

소장 제출 및 송달

답변서 제출

변론 준비

변론기일 진행

변론종결 및 판결선고

영업비밀 특징

- 영업비밀의 내용의 특징
- 비공개 심리 및 비밀유지명령 활용

영업비밀성 요건 설명

- 권리의 증명
- 비공지성 / 경제적 유용성 / 비밀관리성

금지청구

- 청구 대상 및 집행장소 등에 대한 구체적 적시 필요

손해배상청구

- 손해액 추정규정의 구체적 특징

영업비밀 침해소송의 절차별 주요 이슈

* Source: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식재산전담부 소송절차안내, 2018.

소장
제출 및 송달

답변서 제출

변론 준비

변론기일 진행

변론종결
및 판결선고

침해여부 답변

- 인정사실 및 부인 사실 구분
- 항변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1

원고가 특정 영업비밀을 사용하는지 여부



2

원고 주장 영업비밀의 영업비밀성 요건 충족 여부

항변사항 정리

- 부경법이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에 관한 각종 주장 사유

영업비밀 침해소송의 절차별 주요 이슈

* Source: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식재산전담부 소송절차안내, 2018.

소장
제출 및 송달

답변서 제출

변론 준비

변론기일 진행

변론종결
및 판결선고

기술설명기일 지정 가능

- 사안의 명확한 파악 · 쟁점 정리 및 변론계획 수립

기술설명기일의 진행

-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당사자 각자의 공격·방어방법 정리 및 설명
- 기술설명자료는 원칙적으로 기일 7일 전 제출

영업비밀 사건에서의 진행 예시



소송절차별 주요 이슈

* Source: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식재산전담부 소송절차안내, 2018.

소장
제출 및 송달

답변서 제출

변론 준비

변론기일
진행

변론종결
및 판결선고

문서제출명령 또는 자료제출 명령

- 문서제출명령 (민소 §344 ~ 351) / 부정경쟁방지법 §14의3 / 특허법 §132

신청인

신청서 기재사항

- 문서(자료) 표시 및 취지
- 문서 소지자
- 문서를 통해 증명할 사실
- 침해의 증명 등과의 관련성

피신청인

의견서 제출 시 기재사항

- 문서(자료) 소지 여부
- 문서 등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

비밀유지명령, 열람등사제한신청

① 영업비밀의 특징

Dilemma...

영업비밀의 구체적 기재

- 심리대상, 소송상 공방, 방어권 행사의 대상 특정
- 집행의 대상/범위 특정(침해금지청구)

VS

영업비밀의 비공개

- 영업비밀의 본질 상 특성의 어려움
- 재판을 통한 영업비밀 공개의 우려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처음 단계부터 제기되어 마지막 단계까지 떠나지 않는 문제

영업비밀의 특정 방법 및 고려 요소



대법원 2013. 8. 22.자 2011마1624 결정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심리와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그 비밀성을 잃지 않는 한도에서 가능한 한 영업비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고, 어느 정도로 영업비밀을 특정하여야 하는지는

영업비밀로 주장된 개별 정보의 내용과 성질, 관련 분야에서 공지된 정보의 내용,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구체적 태양과 금지청구의 내용, 영업비밀 보유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영업비밀의 특정 예시

기술의 명칭과 개략적/추상적 내용으로 특정

- 예 : AAA 제조에 관한 기술, aaa 공법에 의한 AAA 제조에 관한 기술

영업비밀 자료(유출된 자료)의 목록으로 특정

- 예 : 파일명/문서제목/유출일시 등

영업비밀 자료의 목록 + 영업비밀 내용의 추상적 설명으로 특정

- 예 : 파일명 + 그 파일에 기재된 aaa 기술에 관한 정보



비밀유지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전제로 영업비밀 특정 구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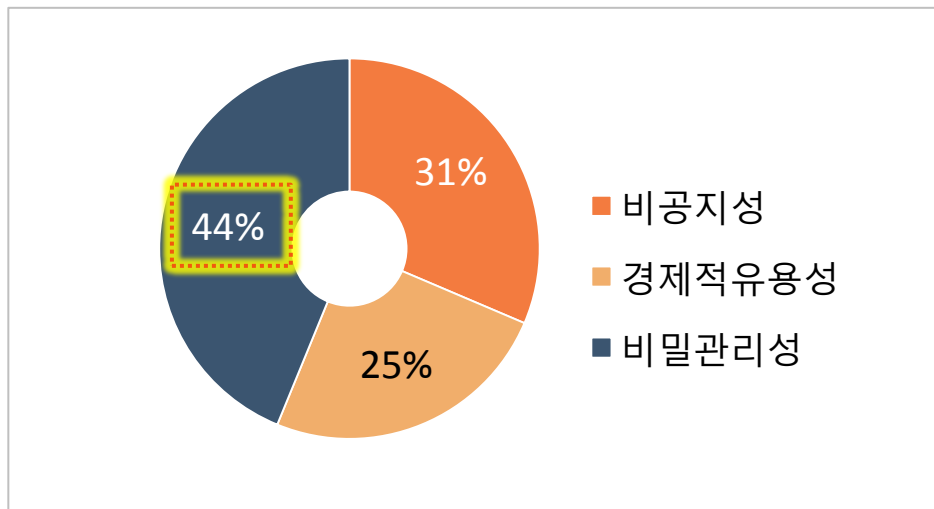
② 비밀관리성의 판단 기준

영업비밀 민사사건 쟁점 (2015 ~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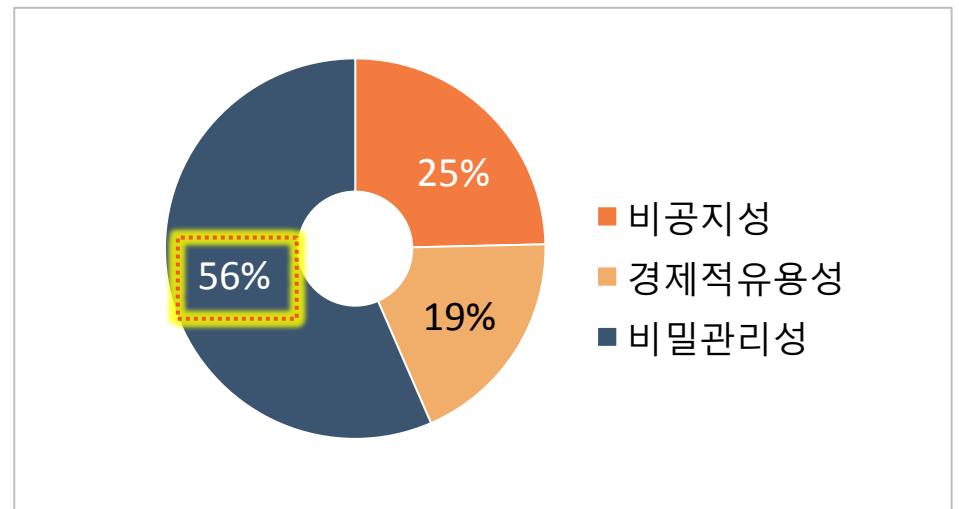
영업비밀 침해행위 민사사건의 쟁점별 구분(건수)

구분	비공지성	경제적유용성	비밀관리성
본안	38	30	53
가처분	17	13	39
합계	55	43	92

본안 사건의 쟁점(비율)



가처분 사건의 쟁점(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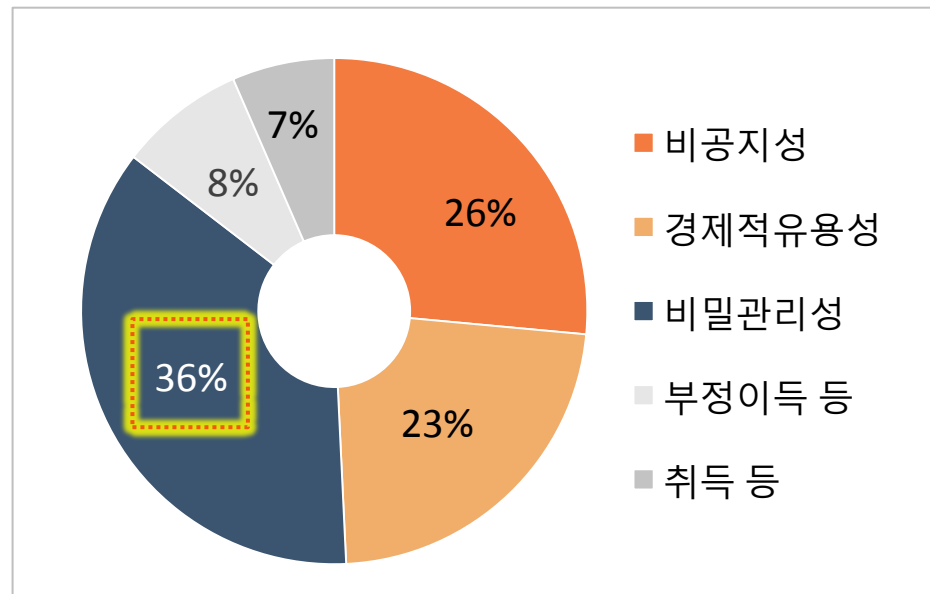


영업비밀 침해 형사사건 쟁점 (2015 ~ 2016)

영업비밀 침해 형사사건 쟁점별 사건 수

구분	비공지성	경제적유용성	비밀관리성	부정이득/손해목적	취득/단순반출/사용
건 수	158	136	216	48	39

영업비밀 침해 형사사건 쟁점별 비율



Source : 다래, 특허청 연구용역 보고서,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국내 판결문 분석 연구 최종보고서

상당한 노력에 의한 비밀관리의 판단기준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317 판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보안책임자 지정

보안장치

보안관리규정

비밀의 분류 및 표시

비밀정보에 대한 접근 및 관리의 제한조치

방화벽 설치, 네트워크망을 통한 접근 여부

보안교육, 서약

다양한 보안조치
관련사항들 종합 고려



주로 보안에 관한 객관적 조치를 중심으로 판단되는 경향

합리적 노력에 의한 비밀관리의 판단기준



의정부지법 2017. 7. 19. 선고 2016가합54329 판결

개정된 요건인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가능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해당정보에 대한 물리적, 기술적 관리, 인적, 법적 관리, 조직적 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각 조치가 합리적이었는지 여부는 영업비밀 보유 기업의 규모, 해당 정보의 성질과 가치, 해당정보에 일상적인 접근을 허용하여야 할 영업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영업비밀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의 정도, 과거에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전력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합리적 노력에 의한 비밀관리성의 판단기준

의정부지법 2016. 9. 27. 선고 2016노1670 판결

상당한 노력의 판단기준

상당한 노력의 판단 기준 : 접근 제한 + 객관적 인식 가능성			
① 물리적, 기술적 관리	② 인적, 법적 관리	③ 조직적 관리	(부차적 요소) 종업원의 수 기업의 규모

합리적 노력의 판단기준

합리적 노력의 판단 기준 : 접근 제한 + 객관적 인식 가능성		
① 물리적, 기술적 관리	② 인적, 법적 관리	③ 조직적 관리
영업비밀 보유 기업의 규모, 해당 정보의 성질과 가치, 해당 정보에 일상적인 접근을 허용하여야 할 영업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 과거에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전력이 있는지 여부 등에 기초하여 판단함.		

신뢰관계, 주관적 인식 여부 등의 고려의 필요성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317 판결

피해자 회사는 그 규모, 연혁, 산업적 특성에 비추어 체계적, 조직적 관리보다는 **인적 유대와 신뢰에 기초하여 영업비밀을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는 독특한 유산균 제조기술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므로 그에 관한 사항이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임직원 누구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1은 피해자 회사의 비밀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자**이므로 피해자 회사가 비밀로 관리하는 정보가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 그러한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의 규모나 종업원 수, 이 사건 정보들의 성격과 중요성 등 피해자 회사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 아래서 피해자 회사는 (중략) 이 사건 정보들에 대하여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고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피해자 회사 나름의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객관적으로 그 정보들이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에 있게 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들은 피해자 회사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③ 소송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출 우려

소송절차에서 증거제출에 의한 영업비밀 공개 우려

영업비밀보호 기반조성을 위한 영업비밀 보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성대 산학협력단, 특허청 연구보고서, 2011. 12. 4., 103면)

경쟁사업자인 원고가 영업비밀을 보유한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후 피고 측의 영업비밀 관련 자료 제출을 신청하는 등으로 **영업비밀 침해소송이 경쟁자의 영업비밀을 알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영업비밀 관련 소송에서는 영업비밀에 관한 주장, 입증이 필요하다.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영업비밀이 공개되는 것을 당사자인 권리자가 두려워하고, 법원도 재판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영업비밀이 침해되어도 재판절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영업비밀을 구체적으로 실시하여 법원에 알려야 하며, 이렇게 알려진 영업비밀이 재판과정에서 상대방이나 제3자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위험** 때문으로도 파악된다. 영업비밀의 권리를 주장, 입증하면서 재판과정에서 비밀성이 상실될 가능성은 차단할 필요가 요구된다.

영업비밀 입증 노력과 영업비밀 공개/유출 위험의 양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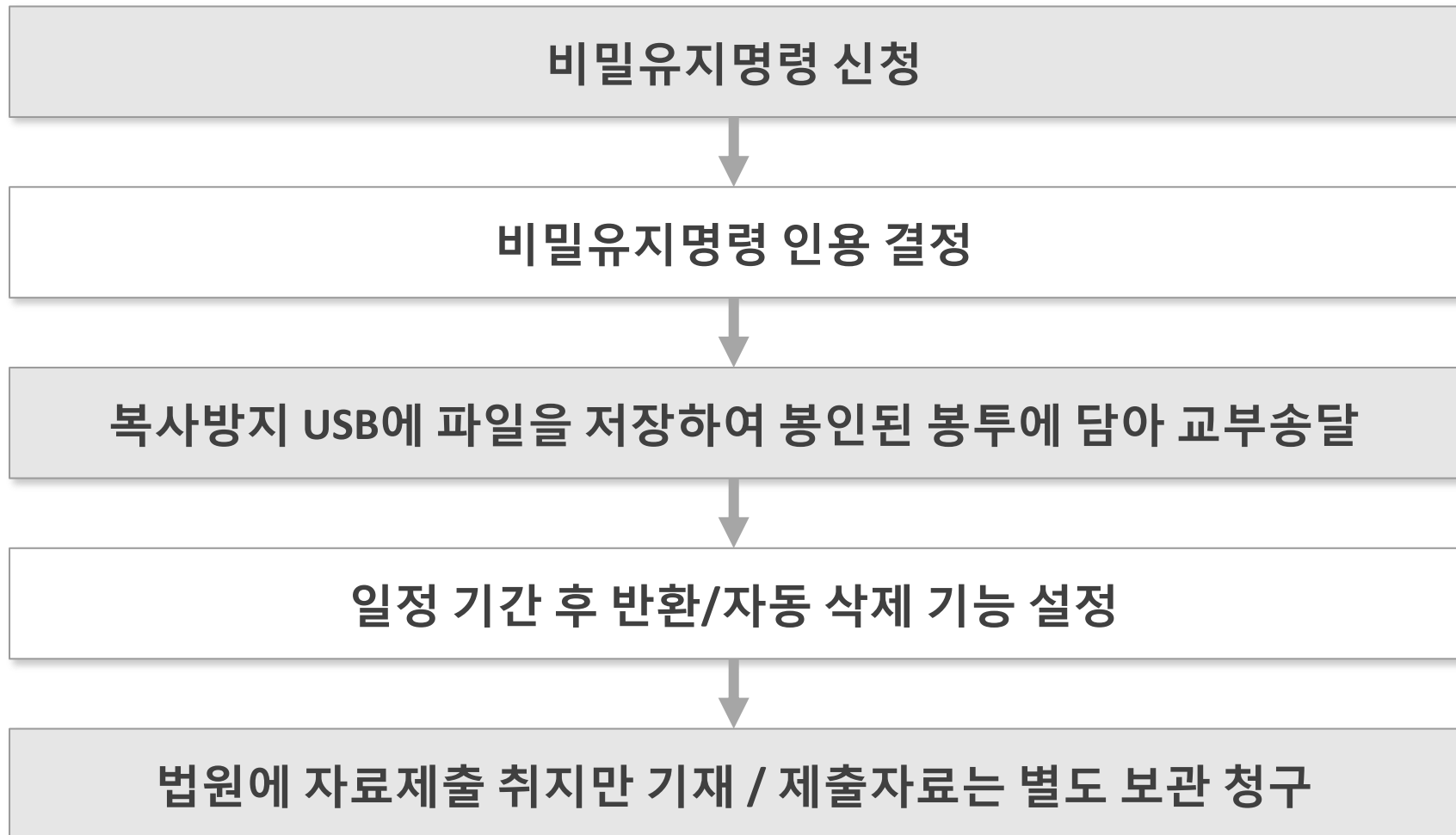
비밀유지명령 하의 영업비밀 제출에 대한 영업비밀 보유자의 우려

- 비밀유지명령의 수범자가 아닌 자에 대한 해당 준비서면이나 증거에의 접근이 완전히 통제되지 않음
- 비밀유지명령 대상 서면 또는 증거를 법원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송달하고 있는 결과, 대리인 소속 회사의 송무부 직원 등에 의하여 해당 자료가 사실상 열람 가능
- 당사자에 대한 공개로 인해 영업비밀 유출의 효과가 발생(ex: 상대방이 내부 연구 참고로 사용할 경우 비밀유지명령으로는 유출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

비밀유지명령의 실효적 개선/운영 방안의 필요성

- 송달방식의 변경을 통한 실효성 확보 필요
- 대리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Attorney-Eyes Only)의 도입/활용

비밀유지명령 실효성 확보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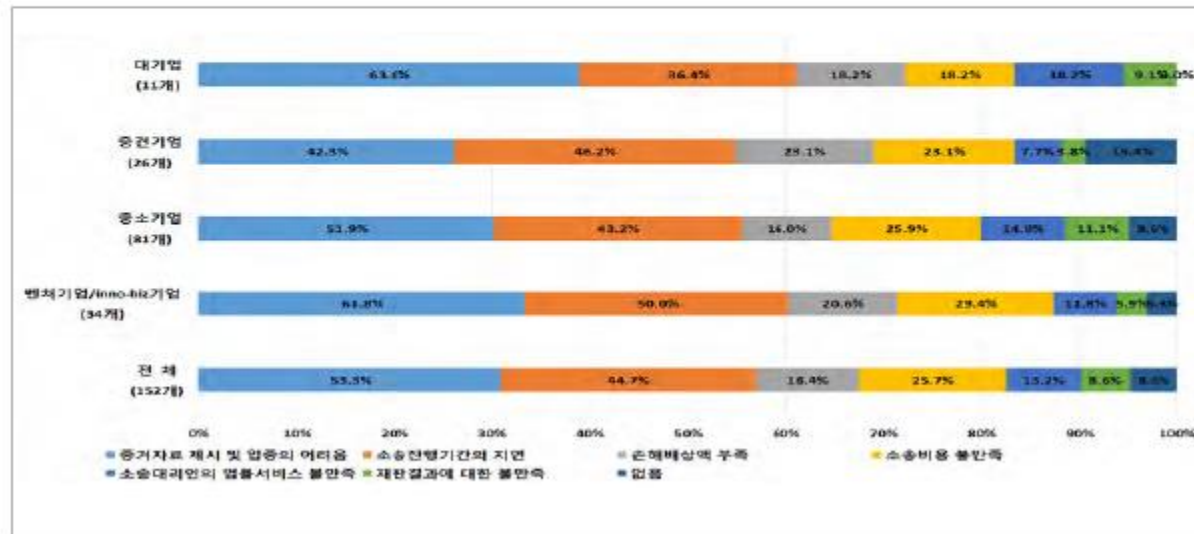
④ 영업비밀 침해 증거의 확보 방안

문제의 소재

지식재산 소송에서 기업들이 꼽은 가장 큰 문제점

□ 민·형사 소송 진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 1순위로 가장 많이 꼽힌 항목은 “증거자료 제시 및 입증의 어려움(53.3%)” 이었고 “소송진행기간의 지연(44.7%)”이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로 응답함 (복수응답)



* Source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5년도 국내 지식재산권 분쟁 실태조사, 특허청 연구보고서, 2015. 12. 31., ix면.

영업비밀 침해사실 입증책임의 곤란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과도한 입증 책임 존재

- ① 원고가 주장하는 기술(영업비밀)이 사용된 사실
- ② 해당 기술이 영업비밀성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
- ③ 해당 기술에 대하여 피고가 부정하게 취득하였다는 사실



① ~ ③의 증명에 필요한 사실이 대부분 침해자에게 존재

손해액 산정 추정규정을 통한 손해 산정의 어려움

원고 입증책임의 곤란 구제 방안

문서제출명령의 적극적 활용

- 재판에 필요한 자료목록 정리를 위하여 재판부의 변론 전 준비명령 적극 활용
- 문서제출명령에 의하여 **당사자의 영업비밀 유출**이라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비밀심리절차** 및 **비밀유지명령** 제도 활성화
 - 준비기일 중 문서제출명령 전 자료의 소지 여부 및 구석명사항의 필요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증거관리기일을 지정/활용
- 당사자의 문서제출명령 거부에 대하여 제출을 요청하는 당사자의 주장을 적극 인용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4항 (In-Camera)의 적극 활용

법원은 문서가 제344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문서를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제344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3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특허법상 자료제출명령 강화 규정 확대입법 추진



특허청

특허청 2018 주요업무계획 - 손해배상 절차 개선 (입증책임 완화 포함)

- 특허법의 침해소송 증거제출 강화 규정 적용범위 부정경쟁방지법 등으로 확대 추진
- 영업비밀이라도 제출의무 부과 / 증거제출명령 대상 확대 등

기 존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해당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 경

- **침해행위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출명령 포함
- 제출거부사유에 영업비밀 주장 불가
- 정당한 제출 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주장의 당부 판단을 위한 자료 제시** 명령
- 증거제출명령 불응시 해당 자료로써 증명하려는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특허법 제132조

증거제출의무 실효성 확보

§132 ①(자료의 제출)

- 기존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제출명령을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명령으로 하였음

§132 ② (비밀심리절차)

- 자료 소지자가 자료제출명령의 정당한 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거부사유 판단을 위하여 이용
- 판사실에서 비공개로 진행

§132 ③ (비밀유지명령)

-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
- 소송대리인 한정열람 제도 도입을 목적으로 입법되었음

특허법 §132

§132 ④ ⑤ (자료 미제출시 불이익)

- 자료제출명령에 불응한 경우 법원은 상대방의 자료 기재에 대한 주장 및 그 기재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가능

⑤ 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

(영업비밀 보호기간)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 존속기간?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그러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headstart)' 내지 '시간절약(lead time)'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에서 기술의 급속한 발달상황 및 변론에 나타난 침해행위자의 인적·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에 상당한 기간 **동안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영구적인 금지는 제재적인 성격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조장하고 종업원들이 그들의 지식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려는 공공의 이익과 상치되어 허용될 수 없다.

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의 산정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24528 판결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 영업비밀의 유지에 기울인 노력과 방법, 침해자들이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기술정보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 침해자가 종업원(퇴직한 경우 포함)인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그에 종속하여 근무하였던 기간, 담당 업무나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정도,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내규나 약정, 종업원이었던 자의 생계 활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허권 등의 보호기간과의 비교, 기타 변론에 나타난 당사자의 인적·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영업비밀 침해금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4나2011824 판결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 소송에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권의 존부를 심리·판단하는 것이므로, 주문에 금지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장래 일정한 기한 내에 영업비밀 요건의 상실이 확실시되는 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금지기간을 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금지기간을 설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영구히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더 이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면 당사자는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이 석 희

shlee3@kimchang.com

02-3703-1424

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준비된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안을 전제로 하는 법률의견이나 자문으로 해석될 수 없고, 저희 사무소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닐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대한 저작권 등 권리는 저희 사무소에 있으므로 저희 사무소의 사전 동의 없이 사용, 복제, 활용 및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없습니다.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희 사무소 또는 발표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KIM & CHANG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39 (우) 03170

Tel: 02) 3703-1114 Fax: 02) 737-9091 / 9092 E-mail: lawkim@kimchang.com www.kimchang.com